

# 開發途上國의 發展分析에 關한 豫備的 研究

高 昌 燾

## 〈 目 次 〉

- |               |                    |
|---------------|--------------------|
| I. 問題의 題起     | IV. 從屬論의 限界性과 可能性  |
| II. 發展論者의 論理  | V. 發展分析 模型의 予備的 構成 |
| III. 從屬論者의 論理 |                    |

## I. 問題의 提起

일차세계대전의 종말로 항구적인 세계혁명의 꿈이 무너지자, “근대화의 꿈”이 이차세계대전 이래 세계적 수준의 점진적인 정책으로서, 서구로부터 남미·아시아·아프리카 대륙으로 확산되어왔다.

사회과학도들에게 있어 전자(前者)의 드라마보다 후자(後者)의 드라마가 흥미와 혼란의 상처를 더욱 깊게 했을 것이다. 사회과학도들은 근대화에 너무나 과대한 기대와 희망을 걸었지만, 일반적으로 혁명에는 너무나 소홀히 해왔다고 생각된다. 1)

이차대전이래 자유민주주의에 이념적 바탕을 둔 정치·행정·사회학자들이 주도한 근대화 또는 발전이론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그들이 안고 있는 제반 위기를 신속히 해결해주고 자유와 복지, 안전과 질서, 정의와 평등의 기반을 구축해 주는 이상적 이념인양 제시되어 왔다. 2)

그런데, 30년이 지난 오늘날 개발도상국들은 발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한채 흥미의 눈에서 시행착오만 거듭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정치발전이란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의 정치

1) Wertheim, W.F. "The Rising Waves of Emancipation from Counterpoint towards Revolution" in *Sociology and Development*, pp 315~328. edited by Willams, Gavin, et al,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Co. Inc, 1974).

2) Brian Loveman, "The Comparative Administration Group,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d Antidevelopment," PAR, (Nov./Dec), 1976. p. 616.

현실을 조명해 볼 때 정치적인 역진기 현상(逆進期 現像)을 드러내는 느낌마저 든다. 3)

도대체 오늘의 개발도상국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발전(misdevelopment), 저개발(underdevelopment), 저발전(undevelopment)의 와중에서 혼란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학자들의 답변은 실로 다양하나 종속이론가(從屬理論家)들의 논리를 사용하면 오늘의 개발도상국의 저발전은,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자본주의의 중심국과 주변국간의 경제관계의 근간으로서 유지되고 있는 국제적 노동분업이 확립됨에 따라 자본주의적 국제체제로 통합되고, 이 체제에서 주변국이 차지하는 경제적 열세때문에 중심국에 경제적으로 심지어는 정치적·문화적 종속(dependency) 현상이 초래되고 이러한 종속관계가 낳은, 필연적 결과인 것이다. 4)

이 글의 주요 목적은 발전을 바라보는 두개의 시각, 즉 발전론자와 종속론자의 이론체제를 조명해 보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분석하는 모형(model)을 초보적인 단계에서 모색해 보는 것이다.

## II. 發展論者의 論理

맑스의 견해에 의하면 진화(evolution)란 혁명과 혼합되어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구 발전론자들은 혁명에 의한 해결방법을 추구하는 사상을 배제한 진화론의 새로운 형태를 착안한바, 여기에서 발전의 개념이 배태(胚胎)된다. 5)

발전이론은 명백히 진화론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다니엘 러너(Daniel Lerner)에 의해 제시된 단선적(單線的) 발전 이론은(전통적 사회는 과도기적 사회를 거쳐 근대화된 사회로 움직이는 과정을 상징) 진화론적 발상이며, 여기서 지칭되는 근대사회는 미국사회와 동일시하고 있다. 6)

또한 진화론적인 발전론의 형태를 경제적인 영역에서 뚜렷이 볼 수 있는데, 로스토우(Walter

3) 金浩鎮, “低發展社會의 政治分析體系” 政經文化 통권 193 호, 5월, 1981. pp 86-103.

4) Dos Santos, “The Structure of Dependence,” in (Wilberled), *The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 and Underdevelopment*, (New York: Random House, 1973), pp. 107 - 117.

종속이란 개념은 Dependence와 Dependency로 혼용되고 있으며, 종속이론가들 사이에도 아직 뚜렷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필자는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개념으로 통합해서 사용한다.

5) W. F. Wertheim, op. cit.

6) Daniel Lerner, et al, *The Passing of Traditional Society*, (New York: Free Press of Clencoe, 1958), p. 401.

Rostow)의 경제성장 단계설이 그렇게 여겨진다.

그는 일명 비공산당선언(Non-Communist manifesto)이라 불리는 저서에서, “발전”이란 정치와는 별도로 작용하는 순수히 수량적인 경제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으로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듯 하다.

그가 말하기를, 러시아에 있어서 도약단계(the take-off)는 이미 1차세계대전 이전에 이룩된 것이다. 러시아 혁명은 다음단계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불필요한 것이었다. 성숙화로 의 매진, 산업적 분화로 향한 과정,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발전의 도모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 버렸다. 7)

정치적 차원에서 헌팅톤(Samuel P. Huntington)은 정치적 안정을 중시하면서 정치적 제도를 정치발전의 설명변수로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제도화는 특정정치 제도의 복잡성, 자율성, 적응성 및 응집력(凝聚力)으로 가늠된다고 하며, 제도화의 수준은 리더쉽의 속성과 사회적 갈등현상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지도자의 속성과 자질 및 능력과 민주주의·정치체제의 적응성을 중시한다. 프랑스 민주주의 전통의 토대는 드골의 정치지도력과 민의에의 존중에서 확립되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8) 행정적 차원에서 발전은 물리적, 인간적, 그리고 문화적 환경을 새 방향으로 발전시키는(reshape)정부의 능력을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리그스(Fred Riggs)에 의하면 발전행정의 주요한 초점은 발전목표에 상응하는 정책과 계획을 보완하고 행정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있다. 9) 에스만(Milton Esman)의 말을 빌리면 오늘날 바람직한 변화는 유도되어야만 하고, 관리되어야만 한다.

7) Walter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p. 24.

(Development = Change + Growth)란 공식을 적용할 때 가장 큰 난점은 쿠웨이트가 일당 국민소득이 스위스보다 더 높다고 해서 쿠웨이트가 스위스보다 더 발전된 것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8) Samuel, P. Huntington, "The Change to Change: Modernization, Development, and Politics," (*Comparative Politics Volume 3, Number 3*, 1971), pp. 283~322.

여기에서 그는 ① 구조기능적 접근법은 분석의 평면을 바라보는 개념의 일반화에 공헌을 하는 반면, 변화를 설명하는 데 약하고, ② 사회과정적 접근법은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밝혀주는 데 기여 하는 반면 정치학에 약하고, ③ 비교역사적 접근법은 역사의 보고에서 사회의 실제적 발전의 유형을 꼬집어내고, 그 유형간의 동일성과 차이성을 경험적 토대위에서 분석하는 시각을 열어주는 반면에 이론에 약하다고 한다.

9) Fred Riggs, "The Contest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Riggs(ed), *Frontiers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72) p. 75.

즉, 발전은 다스려져야 한다 (administered)는 논리다.<sup>10)</sup>

발전론자의 논리는 주로 위로부터 주도되고 이끌어 지는 과정을 발전으로 생각하는 듯 하다. 그러한 발전과정은 과거에 실제적으로 발생했었고, 사회를 고도의 생산수준과 경제적 성숙을 추구하는 동인(動因)이 되었었다. 이에 대한 인상적인 예가 일본이 아닌가 싶다. 일본은 기존체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회집단에 의한 위로부터의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혁명없이 밑으로부터의 대중운동과 연결시켰다. 그들의 발전 드라마는 명치유신(明治維新) 이후인 1860년대에 시작되었다. 로스토우가 자본주의 역사속에서 모범적 경제도약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경우를 제시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sup>11)</sup>

하지만 금세기에 들어서서 일본과 같이 원숙한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개발도상국은 찾아 보기 힘들다. 오히려 개발도상국에서 경험하는 것은 아이젠스타트(Eisenstadt)가 얘기하는 발전의 붕괴현상(breakdowns of modernization)이다. 그에게 있어서 발전은 점진적인 과정이며, 이 흐름은 중심에서 주변으로, 소수의 엘리트에서 광범한 그룹과 계층으로 확산된다. 이 과정은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좌절과 저항의 덩어리로 인식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부드럽고 조화로운 역사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적·문화적 영역에서 먼저 일어나는 쇠신의 바람은 사회의 중심에 자리한 정치구조의 탄력성을 신장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그 중심의 탄력성은 주변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힘이 된다. 결국 발전의 중심과제는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사회내에서 강력하게 흡수·통합하는 체제능력을 성장 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그는 발전의 성공적 달성은 지도적 엘리트의 방향성과 주체성과 요구와 반항과 좌절을 제도적으로 생동력(生動力)있게 흡수할 수 있는 중심구조의 능력에 달려있다.<sup>12)</sup> 그러므로 그는 기존의 전통적 상징과 제도의 탄력적 운영으로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논리를 시사한다.

또한 체제구조기능적 모형을 대변하는 알몬드의 발전 개념을(정치적 발전을 의미하는) 생각해 보자. 그는 발전과 변화를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정치발전을 도전과 응전의 역학관계로 설명한다. 이들의 논리는 구조가 분화되고 자율성이 신장되고, 세속화가 균형있게 성숙됨으로

10) Milton J Esman "CAS and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in Fred Riggs (ed), *op. cit.*, pp. 41~71.

11) W. F. Werthheim, *op. cit.*

12) S. N. Eisenstadt, *Modernization; Protest and Change*,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66), pp. 1~47. *Breakdowns of Modernization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Englewood Cliffs, W. J; Prentice-Hall, 1964), pp. 354~367.

써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응전력의 향상을 의미한다. 13)

이상 필자는 발전론자 14)의 논리를 몇사람의 대표적 학자들을 중심으로 피상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이들이 갖는 공통적인 논리는 대략 다음과 같이 사료되는 바, 첫째, 진화론적인 발전을 구상하고 있으며 발전개념을 서구화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15)

둘째, 위로부터의 개혁에 착안하고 있으며 밑으로 부터의 혁명을 경원시 하는 듯 하다. 갈등보다는 안정에, 배분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며 엘리트에 의한 개혁을 민중에 의한 혁명보다 중시 하는 듯 하다. 16)

셋째, 가치중심의 과학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근거에는 공리주의가 근본적 이데올로기 (Ideology)로서 깔려있다. 17)

네째, 주로 특정국가의 대내적 요인으로 부터 발전의 맥락을 찾고 발전의 설명변수를 도출하고 있다. 18)

다섯째,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기대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정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19)

### III. 從屬論者 20)의 論理

종속론자의 논리는 발전론자들이 상정한 발전논리와 개발도상국들이 노정한 현실과의 괴리현

13) Gabriel A. Almond and Bingham G. Powell, *Comparative Politics; A Developmental Approach*, (Boston, 1966), P. 13.

Almond의 이론구조는 투입면에서 요구와 지지를 정치적 과정을 거쳐 산출면에서 결정과 정책으로서 법률제정, 법률적용, 법률해석이 된다. 여기서의 정치과정은 David Easton의 이론에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며 B. Macperson의 용어로선 得矢相殺의 원칙 (Zero-Sum game)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체제는 권력의 단순한 전이가 아니라, 사회적 상호관계의 집합체로 간주하고 있다.

14) 여기서의 발전론자는 50~60년대에 걸쳐 정립·발전된 주요 발전이론을 주창하는 보수주의적 발전이론가들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코져 한다.

15) W. F. Werthheim, op. cit.

16) Brian Loveman, op. cit.

17) Tom Kemp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Owen and Satchell (eds), *Studies in the Theory of Imperialism*, (London: Longman, 1975), pp. 13~34

18) Raymond B Pratt, "The Underdeveloped Political Science of Development,"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spring 1973), pp. 88-109

19) 金浩鎭, op. cit.

20) 종속론자들 중에는 강경론자와 온건론자로 구분되기도 하며, 종속이론은 패러다임 이전의 이론으로 해석되고 있는 듯 하다. 여기서는 종속론은 보수주의적 발전이론에 대칭되는 것으로 사용하겠다.

상이 심하다는 데 그 근원을 두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현실은 균형있는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저발전과 왜곡발전의 악순환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바, 종속론자들은 이러한 병리현상을 전체론(holism)의 입장에서 변증법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기술·설명·비판하고 그들 나름의 발전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관심의 초점을 겨냥하고 있다.

전체론이란 진리는 전체라는 전체하에 사회현상의 총체적 이해를 추구함으로써 부분의 이해를 도모하는 방법론적인 입장을 지칭한다.<sup>21)</sup>

갈통(Johan Galtung)에 의하면 국가간의 불평등은 구조적 폭력에 기인하는 바, 국가들은 중심국과 주변국으로 구성되고 이는 다시 중심국의 중심과 주변, 주변국의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고 이들 간에 이해의 갈등현상을 구조적으로 해부한다. 더 구체화 시켜서 그는 ① 중심국의 중심과 주변국의 중심이 이해가 일치하고, ② 주변국내의 제계층간의 불화는 중심국내의 제계층간의 불화보다 그 정도가 더 심하고, ③ 중심국의 주변계층과 주변국의 주변계층에도 불화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갈통이 제시한 이 명제는 매판 자본세력과 반민족적 정치세력은 다국적 기업과 공통의 이익을 나누며 공생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쉽게 입증된다.

근로자에 대한 저임금정책과 노동운동의 억제는 국내의 매판엘리트들도 다국적 기업의 요구대로 응해주면 상당한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매판엘리트들은 중심국의 중심세력과 결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경제적 차원에서 수직적 관계를 영속화 시키는 제국주의의 메카니즘이 되고, 중심국에 의한 주변국의 착취가 ① 약탈단계(원자재 약탈등) ② 불평등한 교환단계 ③ 중심국에는 파생효과(Spin-off effects), 주변국에는 역류효과(Backwash)를 파급하는 단계로 진행된다는 것이다.<sup>22)</sup>

요컨대, 중심국과 주변국과의 구조적 수직화현상을 기초로한 종속관계가 구조화되면 종속국의 경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된다. ① 외국자본의 대량침투 ② 새로운 외국 기술의 대량도입 ③ 수출강화 ④ 엘리트 계층의 소비 패턴의 서구화 ⑤ 소득격차 및 실업의 증대현상이다.<sup>23)</sup>

종속론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총칭하여 저발전 또는 왜곡발전이라 표현하는 데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면 종속국의 중심계층과 주변계층사이에는 갈등과 대립이 태동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중심계층을 대변하는 정치권력과 주변계층을 대변하는 민중세력은 대립관계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21) Tony Smith, "The Underdevelopment of Development Literature: The Case of Dependency Theory," *World Politics* 31 (Jan. 1979), pp. 247~288.

22) Johan Galtung, "A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 *Journal of Peace Research* 8(2) (1971), pp. 81~118.

23) S.Lall,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Emerging International Technical Order",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31-1 (Spring/Summer 1979), pp. 77~88.

도스 산토스 (Theotonia dos Santos)는 종속이란 일단의 국가들의 경제가 다른 국가들의 발전과 팽창에 의해 조건지워지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종속국가들이 자국의 직접적인 발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배국가의 팽창에 의해서만 팽창하는 반면에, 어떤 국가들은 자기추진력에 의해 팽창하게 될 때, 둘 또는 그 이상의 경제간의 상호의존 관계가 되며 그러한 경제와 세계 무역 체제간의 상호의존 관계는 종속관계가 된다.<sup>24)</sup>

또한 칠레의 경제학자 순켈(Oswaldo do Sunkel)은 저발전(低發展)의 역사적(歷史的)관점(觀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는 바, 저발전(低發展)은 경제적(經濟的)·정치적(政治的) 및 문화적(文化的)으로 고립된 사회의 연속적 또는 불연속적인 진화과정의 한 국면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 그와는 반대로 저발전은 세계적인 역사적 발전과정의 한 부분인 동시에, 발전과 저발전은 동일한 보편적 과정의 두가지 국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가지 과정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또한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그것들은 상호작용할 뿐만 아니라 서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sup>25)</sup>

종속론가들은 저발전의 원인분석에서 출발하는 바, 그들의 발전론자의 논리에 대한 비판이 바로 그것이다. 그 비판을 총합해보면, 첫째, 발전론자의 논리는 비인간적이라는 것이다. 발전론자는 균등한 배분이나 인권과 같은 인간적인 개념은 도외시하고 체제능력의 향상을 통한 발전이나 성장을 추구해왔는 바 체제적 개념에 지나친 비중을 두고 인간조건의 개선은 이차적인 문제로 등한시 했다는 것이다. 이 결과 가난한 민중은 더 가난하게 만들고, 권력은 발전주도 엘리트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더욱 강화시켰다는 것이다.<sup>26)</sup> 둘째, 발전론자의 개념규정과 접근방법은 사회진화론적인 발전관에 입각하고 있는 데 그것은 단지 현상유지론에 불과하며 지배계층의 이익에 봉사하는 보수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셋째, 이른바 과학적 접근방법 즉 행태주의 접근방법을 우상시 함으로써 정작 규명되어 마땅한 중요 문제는 도외시 했으며, 부분을 통해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환원주의(reductism)의 오류에 빠짐으로써 전체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이다.<sup>27)</sup> 넷째, 국제권력구조 및 국제자본주의 경제질서상의 좌표와 그 상관 관계를 무시하고 대내적인 요인에만 입각해서 발전을 설명하려고 시도한

24) Dos Santos, "The Structure of Development and Underdevelopment, (New York: Ranclom House, 1973), pp. 107-117.

25) Oswaldo Sunkel, "The Pattern of Latin American Dependence," in Urguidi (ed), *Latin America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8), pp. 3-34.

26) Brian Loveman, op. cit.

27) 金浩鎮, op. cit.

것은 오류라는 것이다. 28)

이상과 같은 이유로 발전론자들이 정립한 발전이론은 억압적인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는 제국주의 과학(Science of Imperialism)이자 부르조아 사회과학이며, 부자에게 좋은 것은 가난한 자에게도 좋은 것이란 이데올로기를 심으려는 의식적 무의식적 반동세력이라고 통렬히 비난한다. 29) 이상 갈통을 중심으로한 종속론자의 분석의 틀과 발전론자에 대한 비판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갈통의 명제가 심화되어 중심국에 주변국이 경제적으로 종속화 됐을 때, 중심국은 생산수단을 성숙화 시키고, 주변국은 원자재와 시장을 제공하는 관계가 되고, 여기서 정치적 종속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 중심국은 결정을 내리고 모델을 창출하고 주변국은 결정에의 복종과 모델에의 모방의 행동이 구조화된다. 또한 군사적인 종속은 중심국은 파괴력을 지닌 고도의 무기를 생산하지만, 주변국은 훈련을 받아들이고 중심국이 쓰다버린 무기를 구입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커뮤니케이션 종속은 뉴스와(News) 통신수단을 제공하는 입장이 중심국의 경우이고, 주변국은 사진과 사람과 상품을 제공하며 중심국의 뉴스를 사들인다. 문화적 종속은 가장 과학적이고 제국적인 모형인데 중심국은 항상 기독교의 복음에서부터 기술의 복음에 이르기까지 가르침을 전수시킴으로써 자율적으로 창조를 발현시키지만, 주변국은 가르침만 받아들임으로써 종속의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속구조의 심화는 중심국의 이익 극대화과 주변국의 매판 엘리트의 결탁을 야기시킴으로써 다국적 기업과 후진국 매판 엘리트와 민중계층간의 괴리가 격화되고, 그것은 다시 주변국의 경제파탄과 사회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군사혁명이나 사회주의 인민혁명의 가능성을 높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혁명은 주로 보수주의 파쇼혁명과 사회주의 인민혁명이며 민주주의 부르조아 혁명은 부르조아 계층의 결여 내지는 미약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30) 그러나 이러한 혁명의 결과는 독재체제

28) S. Bodenhaimer, "Dependency and Imperialism," in K.T. Fan. and P. C. Hodges (eds), *Reading In U.S. Imperialism*, (Boston: Porter Sargent, 1971), pp. 155~182

29) Andre G. Frank, "Dependence is Dead long live: Dependence and the Class Struggle; An Answer to Critics," *World Development* 5(4) (1977). pp. 355~370  
Robert A. Packenham, "The New Utopianism; political Development Ideas in Dependency literature," Paper Presented in a Colloquium in the Latin American Program, The Wilson Center, 29 September, 1978

Bodenhaimer는 발전론을 이익계층의 Ideology로서 해석하며, Packenham은 自民族本位的 착상에 근거한 체제 옹호적 부르조아 사회과학자로 Frank는 인간조건을 악화시킨 비인간적 학문이며 희생자 비난이론이라고 명명한다.

30) Johan Galtung, op. cit. pp. 91~93

로의 길을 걷게 되고, 독재체제는 내적인 모순과 외적인 종속구조의 모순으로 인하여 주변국은 종속구조의 극복없이는 위기·혁명·독재의 악순환의 늪에 갇힌다는 것이다. 31)

이상과 같은 논리에서 개발도상국은 식민지 지배란 역사적 경험으로 인한 악조건과 국제자본주의의 질서속에서 중심국에의 종속관계로 인한 엄청난 압력으로 인하여 군국주의 국가 (garrison state)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종속관계가 심화되면 체제의 경직화의 사이에는 正의 함수관계가 있다는 사례연구 32)와 미국의 원조는 수혜국의 민주주의 질서유지와 인권신장에 역비례된다는 연구를 33) 제시하고 있지만 실증성의 회박과 검증 불가능성의 문제로 인하여 적실성 (適實性) 있는 이론모형으로 인정되기 보다는 오히려 특수성을 강조하는 이론 모형이 될 가능성이 짙다.

#### IV. 從屬論의 限界性과 可能性

어떤 이론이든 특정한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토대 위에서 생성되는 고로 한계와 가능성을 갖게 마련이다.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몇가지 지적해 보려한다.

역사적인 시각에서 볼 때, 저발전의 운동법칙 (Law of motion of dependent capitalist Underdevelopment)은 비참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역사적 경험 (식민주의와 저발전의 혼돈등)에서 찾아 낸 것이지만 그것은 종속→저발전→사회주의 또는 보수주의 (과소체제) 혁명으로 정식화 (定式化) 하는 바, 각 나라마다의 특수한 상황을 도외시한 형식논리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렇지만 종속이론은 당하고만 지냈던 역사적 맥락과 국제환경의 위협에 맞서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는 개념의 틀을 정립하고, 이에 알맞는 이데올로기와 제도를 설정하려는 데 그 가능성이 있다.

31) Tony Smith, op. cit. p.267

32) Robert B. Stauffer, "The Political Economy of a Coup: Transnational Linkages and Philippine Response" *Journal of Peace Research* 11 (3) (1974), p. 162.

33) Egbal Ahmacl, "The neo-Fascist State: Notes on the Pathology of Power in the third world" *IFDA Dossier* 19 (Sep/oct 1980), pp. 15-26

여기서 미국과 브라질과의 원조 및 신용대부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하고 있다.

34) Noan Chomsky and Edward Herman. *The Washington Connection and Third World Fascism*, (Boston: South end Press, 1979), P.44. 이들은 미국과 종속관계가 있는 10 개국을 선정해서 미국 원조와 수혜국의 인권정책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것이다.

35) 金浩鎮, op. cit.

36) Gabriel Palma, "Dependency: A Formal theory of Underdevelopment or a methodology for the Analysis concrete Situations of Under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6 (1978). pp. 903~905

방법론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론은 단순한 가설이 아닌 실증된 이론이 되려면 설명력이 있어야 하는데, 종속론은 민족이익이나 제국이익과 같은 가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바 이성과 사실에 입각하여 가설을 검증하고 보편타당한 일반이론의 도출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객관적 사실보다 주관적 판단과 이해에 준거해서 논리를 전개하는 바 학문의 정치문제화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중립의 문제는 불가해한 논쟁이며, 사회과학의 유용성과 관련지워 볼 때 특히 문제가 된다. 사실 가치중립을 표방하는 행태주의의 근저에는 공리주의에 대한 믿음이 깔려있다고 생각된다. 허지만 자아준거적(自我準據的)인 주제적인 시각에서 제3세계의 저발전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는 데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것 같다. ㉞)

발전대안의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종속론은 유토피아적인 수준에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점중의 하나는 국제관계의 정책적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대내적인 정치체제 개혁의 문제이다. 전자는 탈종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국제적 처방이 필요하고, 가능한가의 문제이고, 후자는 그들의 발전목표를 정립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그들의 가용자원(인적자원을 포함)을 어떻게 동원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 두가지 문제는 그들의 발전전략의 두가지 측면에 불과하므로 불가피하게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 강은양론(強穩兩論)이 엇갈리고 있다. 강경론자들은 사회주의 혁명 불가피론을 주장하는 바 혁명의 적대대상은 중심국과 외세에 의존해서 현상에 안주하는 매판 엘리트이고, 혁명추진의 중추세력은 지식인 또는 마르크스주의자이며, 동원의 주대상은 민중세력이어야 하고, 국가경제의 자주적인 발전과 평등 및 사회정의 이념구현이 가능한 자급체제(Autarky)를 채택해야 한다고 하고, 온건론자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원칙적으로 긍정하면서 개혁과 수정을 통하여 수직적 종속을 수평적인 대등관계로의 전환을 추구함으로써 진정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종속론은 발전전략의 문제에 있어서 유토피아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듯 싶다.

허지만, 이 이론은 인류역사와 이를 움직이는 이론과 규율이 언제나 강자와 승자에 의하여 쓰여온 상황을 극복하고 약자와 패자에 의하여 쓰여진 역사적 기록과 사회개혁의 외침이란 점에서 새로운 가능의 지평(地平)을 열었는지도 모른다. ㉟)

## V. 發展分析 模型의 予備的 構成

필자는 발전론자의 논리와 종속론자의 논리를 피상적이거나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발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발전론자의 이론에 계속 매달려서 기성 이론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되

37) 李佳鍾, “종속이론은 왜곡되고 있다.” 政經文化 통권 제 195 호 (1981), pp. 148~159

38) 李佳鍾, op. cit.

며, 종속론자 이론에 너무 집착 추종하여 종속이론에 종속화되어서도 안된다. 중요한 것은 외국이론을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고 개량, 발전시키는 토착화에 있다.

인식론적 시각이 다르고 철학적 배경을 달리하는 두개의 학문적 분파의 발전논리를 어떤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수용할 것인가? 선형적(先驗的)이며 논리적 분석에 의하여 평가하려는 노력은 거의 헛수고일지 모른다. 두개의 이론을 평가하는 데는 목적가치를 설정하는 데 동의하여야 하고 설정된 목표가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비로소 평가가 가능한 데 이 두개의 이론은 그 추구하는 목적가치가 역사상 양보할 수 없고 상호간의 우열을 다투는 문제로 인하여 난관에 부딪힌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끌어 온 자유와 평등이 바로 그것인데, 이것이 발전이란 가치에 의하여(특히 경제발전) 평가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목적이 먼저냐, 수단이 먼저냐라는 선형적 논쟁은 끝없는 역사의 싸움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형적 논쟁을 판가름하는 하나의 기준은 「대중의식의 역사흐름」이란 역사의식의 방향성 일런지 모른다. 39)

우리는 1883년 인천개항을 발전의 기점으로 잡는 데 개항은 서구 자본주의 문화의 유입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세의 강요에 의하여 유입된 문화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에 이질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지만, 발전의 드라마는 한국사회전반에 변화를 유발시켰다. 40) 이 변화는 조선말의 풍전등화속의 혼란기와 단절의 식민통치 시대와 대한민국 30년의 시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전과 전통의 상호관계를 일으키면서 계속되었고, 이 변화는 지속적이고 축적적이고 집약적인 것이다. 이 변화의 정향성은 전통사회에서 근대화로,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신분사회에서 계약사회로 유목농경사회에서 도시사회등으로 표현되는 진화론적이고 이분적인 발전을 그 목표로 삼았다는 데 있으며, 이 변화의 메카니즘은 본질적으로 성장, 분화와 성숙화의 유기적 메카니즘을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41)

이러한 변화의 목표와 메카니즘 그리고 정향성이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을 지속시켰는지 아니면 저발전의 악순환의 와중을 헤메게 하는지, 이 문제의 대답은 대중의식속의 역사의 흐름으로 가능해야 할지도 모른다.

종속이론의 가능성이 인류사에서 약자가 받은 피해의 결과물로 산출된 대안이었다는 데 있다면, 우리 근대사도 이러한 맥락에서 뚜렷한 업적이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근대사에서 역사에 역행한 세개의 응어리를 이조말기의 정부,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39) 李佳鍾, op. cit.

40) 趙巖濤, “한국민족자본형성사”, 한국현대문화사대계 IV: 政治·經濟史.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78), pp. 423~428.

41) Krisham Kumar, “The Industrializing and the Postindustrial Worlds; on Development and Futurology” in Emanuel D. Kadt and Gavin Williams (eds) pp. 331~332.

등으로 가정해 볼 때 이 세 개의 응어리에 건설적으로 대항한 운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말의 경우 동학혁명의 집강소(執綱所)운동, 독립협회의 시도, 상해에 있던 임시 정부등이 그 당시 우리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승만 정권에 대항하여 언론, 대학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야당조직이 있었던 것도 우리 겨레의 업적으로 볼 수 있다. 70년대 후반에 있었던 현상을 볼 때에 재야의 단체들 외에도 신민당의 활성화와 그리고 복교학생과 복직 교수를 받아들이는 대학등도 통치체제와 민중을 연결시키는 우리의 대안으로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말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집강소나 독립협회와 같은 사회단체의 형성은 위정척사사상·개화사상·동학사상등 3개 사상이라는 전체사회의 발전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후의 작업이었다.

그리고 이들 사상은 비참한 현실에 대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고민한 지식인 인물들이 형성한 사상이라고 생각된다. 통치집단의 합리화를 통한 발전의 추구가 정부의 자발적인 개혁의지에 의해서 실천되지 못할 때 정부에 대하여 화해와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사회단체가 형성됨으로서 정치행정 수준이 합리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발전의 방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관(官)과 민(民)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발전의 방향은 상기의 네 과정 ① 건전한 의식을 가진 사람 → ② 목표형성 → ③ 사회단체 → ④ 합리화한 통치집단의 순서로 형성·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의 상정에는 가치전체를 수반하고 있는데 체제와 민중과의 평화로운 관계속에서 발전이 추구되어야 하는 데 이를 위하여 독재의 횡포를 합리화 시킬 수 있는 체제와 혁명의 난동으로 치달을 수 있는 민중사이에는 적어도 ① 건전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 ②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낸 전체사회의 목표 ③ 체제의 독주와 민중의 난동 사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각종 사회단체 그리고 ④ 합리화한 통치체제가 있어야 한다는 발상이다. 물론 한 사회가 최선을 다해 발전의 방향을 정립했다 하더라도, 그 운동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는 허다하다. 동학혁명은 일본군대의 소총부대에 의해 무너지고, 3·1운동은 군국주의 일본제국에 의해 무산되버린 사실을 볼 수 있지만, 발전의 맥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생각된다. 42)

이 글의 다른 하나의 전제는 건전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건, 이 사람들이 형성한 목표이건, 사람이 형성하는 사회집단이나 통치집단이건 다 발전이란 공동 목표의 추구에 진력해야 하는 데, 공동발전목표의 설정상 의미있는 것은 ① 비참한 현실에 대한 문제해결에 착안할 것(불평등의 문제) ② 해결방법이 비폭력적일 것(자유의 문제) ③ 사람이 사람을 목적시 할 것(인간주의의 문제)등 이라는 것이다.

42)李文永, 한국행정론(서울:일조각, 1980), pp. 342~345.

비참한 현실에서 야기되는 불평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분야는 사회·경제학이며, 종속론자가 제기한 기본명제라고 생각된다. 비폭력적 해결방법에 관심을 갖는 학문분야는 민주주의 정치학인 바, 발전론자가 추구하는 방향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되어 진다. 사람이 사람을 목적시하는 학문분야는 철학이다. 이 세가지 학문이 부각해 내는 기본 명제를 사람이나 사람이 세운 목표나 사람이 형성하는 단체들이 다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극우적 독재나 좌익적 혁명이 문제해결 방법이 어느한 명제에 치우친 결과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 세계의 기본 명제를 다함께 지니지 않은 데서 발생한 산물로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3)

이 네개의 형성물과 세계의 기본명제로 발전 매트릭스를 구성하면 12개의 과제가 설정된다.

표 I : 발 전 메 트 리 스

목 표 / 형 성 물	불평등의 문제 (비참한 현실문제 해결)	자유의 문제 (비폭력적 해결 방법)	인간주의 문제 (사람을 목적시)
건전한 의식을 가진 사람	1	2	3
목 표 형 성	4	5	6
사 회 단 체	7	8	9
합리화된 통치집단	10	11	12

표 I에서 체제와 민중사이에서 형성되어야 할 지식인은 부당하게 낮고, 없는 자의 편에서 (비참한 현상이나 현실에 대한 관심때문에 : I) 비폭력적 해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고 (2) 그 결과 물질적 혜택도 받지만 오히려 인간 자체가 성숙된다는 혜택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의 등장하는 것이 발전을 푸는 열쇠가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생각해 보면 통치집단은 비참한 현실문제 해결을 착안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10) 민중들에게 비판과 반대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하고 (11) 민중을 정치적 동원의 대상이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수단으로 보지를 받아야 한다. (12)

필자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체제와 민중과 평화로운 관계속에서 발전목표의 정립을 검토해 보았다.

발전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사람자체가 존중시 되어야 한다. 체제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고, 체제속에서 사람이 산다. 그러나 체제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체제를 위해서만

43) 李文永, op. cit.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논리에서 볼 때 발전논자의 딜레마는 체제유지에 지나친 비중을 둠으로써 인간을 목적시 하기 보다는 수단시하는 결과를 드러냈다는 데 있을 것이다. 발전의 본질은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데 보다는 인적·물적자원을 창조하고 쇄신함으로써 인간을 위한 환경을 개발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44)

자본주의의 가치와 사회복지 논리와 의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 강익강(強益強), 약익약(弱益弱)의 구조적 현상이다. 이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중속론의 입장은 발전의 또 다른 면을 조명한 것이다. 중산층만이 아니라 저소득층도 발전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회에의 평등에서 결과에의 평등까지 사회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5)

우리는 이조시대의 유교적 전통중에서 중요한 정치사상의 맥을 표현하는 글귀를 찾을 수 있는데 맹자의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은 가벼히 여긴다) 라는 것이다. 여기서 민중이 가장 근본이라는 해석을 내리는데는 문제가 많지만, 민을 중요한 것 중의 으뜸이 되는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46) 이는 유학의 민본사상(民本思想)으로서 백성을 위한 위민사상(爲民思想) 일뿐 국민에 의한 국민의 사상으로의 민주주의의 본질적 개념과는 다르지만, 이 뿌리가 울곡과 다산으로 연결되면서 민본사상이란 나무로 성숙된다.

이울곡의 정치사상에서 여론 정치가 그 핵을 이루고 있는데 『言路의 開塞』는 곧 정치적『홍망의 所係』로 직결되고 (言路開塞 興亡所係) 여론은 대중의 일반의사를 대변하는 『公論』을 통하여 『國是』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시키는 바, 『공론의 發은 國人(온국민)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니 그것을 막을 수가 없으며 그같은 與情(여론 보다 강한)에 따를 때 바로 國是가 정하여 진다.』 (公論之發 出於國人 不可沮遏 則順與情 定國是)가 바로 그것이다. 47)

이울곡의 민본사상은 다산으로 연결되면서 단순한 위민사상을 넘어 “依民思想” 혹은 “主權在民思想”에 유사한 민본사상으로 성숙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의 『原牧』이라는 논문에서 『민에 의해서 목이 존재하는가? 민이 목을 위해서 태어났는가?…민은 고혈(膏血)과 진수(津髓)를 다 짜내어 목을 살찌게 하니, 민이 목을 위해서 태어난 것인가? 아니다, 아니다, 목이 백성

44) William. J. Siffin "Two Decades of Public Administ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P.A.R. (1976. 1/2) pp. 61-71

45) Vic George, *Ideology and Social Welfare* (London:Routledge, 1976), pp.129-130

46) 李萬烈, 한국 근대 역사학의 이해 (서울:文學과 知性社. 1981), p. 221

47) 崔昌圭, 韓國의 思想, (그 주제와 본질), (서울:瑞文堂, 1973), pp. 64-65.

48) 尹在豐, “茶山의 行政思想” 韓國의 政治行政의 體系 (金雲泰外 共著) (서울:박영사 1981), P.478.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1集 10卷 “原牧”云 p. 5

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牧爲民有乎 民爲牧生乎 民竭其膏血津髓 以肥其牧 民爲牧生乎 日否否 牧爲民有他)<sup>49)</sup>』라고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다산의 민본사상으로서의 의민사상의 내용은 국민의 정치행정에 대한 통제내지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함축돼 있다.

탕론(湯論)이란 논문에서 『무릇 천자(天子)란 어찌하여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늘에서 비내리듯 천자가 되었는가? 아니면 땅에서 샘솟듯이 솟아나서 천자가 되었는가?……

다섯가구가 1隣이 되므로 다섯사람이 인장이 되고, 다섯인이 1리(里)가 되므로 다섯 인에서 추대된 사람이 리장이 되고, 다섯 비(鄙)가 1현(縣)이 되므로 다섯 비에서 추대된 사람이 현장이 된다. 여러 현장의 공동추대를 받은 사람이 제후가 되고 제후들이 공동으로 추대한 사람이 곧 천자이다. 그러므로 천자란 민중의 추대에 의해서 천자가 된 것이므로 민중이 추대하지 않으면 천자가 될 수 없다.…… 옛날에는 (요순시대) 정치가 “아래로부터 위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아래로부터 위로가 순서이었으나 지금은 그와 반대로 정치가 위로부터 아래로 실시되기 때문에 아래로부터 위가 반역이 되었다. (夫天子 何爲而有他 將天雨天子 而立之乎 抑通出地爲天子乎 五家爲隣 推長於五者 爲隣長 五隣爲里 推長於五者 爲里長 五鄙爲縣 推長於五者 爲縣長 諸縣長之所其推者 爲諸侯 諸侯之所共推者 爲天子 天子者 衆推之而成者也 夫衆推之而成 亦衆萬推之 而不成…… 古者 下而上 下而上者 順也 今也 上而下 下而上者 逆也』<sup>49)</sup>

이러한 민본정치 사상의 맥은 천도교에서의 인내천 사상에서도 전수되고 있는데, 인간의 평등과 존엄을 기초로한 인본주의의 이념을 주장한 것으로 생각된다.<sup>50)</sup> 이렇듯 우리는 인간을 목적시하는 전통을 간직하면서 살아온 겨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을 위한 일이어야지 일을 위한 일이거나 통치집단의 영화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서는 안된다. 경제분배를 중시한 경제성장정책, 또는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안보정책이라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전통중에는 부국강병 전통이 없는 것 같다.

이조시대의 발전목표는 인(仁)이다. 인이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선한 마음을 기초로 한 것이지 사람을 무섭게 다루더라도 부국강병만을 추구하려는 악한 마음을 기초로 한 것은 아니다. 인이란 인본 및 민본사상으로부터 장구한 역사과정에서 형성된 의식이며 한민족의 생존능력이며 정신이라 볼 수 있다. 이 정신은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인간화를 의미하며 이는 시공을 초월한 도덕적 원칙이며 지상적 가치전제이다.<sup>51)</sup> 이러한 전통은 현대문명의 병리적인 물질만능과 메카니즘 속에서 비인간화 되고 있는 모순을 극복하고 창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 형성의 근원적 디딤돌이 될 수 있다.

49)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1集 11卷 “湯論”云 p. 24

50) 千寬宇, 韓國史의 再發見 (서울: 일조각 1974), p. 294

51) 韓貞一, 韓國政治發展論 (서울: 전예원 1982), pp.184-214.

그 다음으로 발전을 집행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체제와 민중사이에서 작용한 힘은 무(武)가 아니라 문(文)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전통속에는 문치주의가 있는데, 서구의 실적주의와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영의정까지도 시험을 보고 채용을 해서 승진시키는 일종의 성적주의였다고 생각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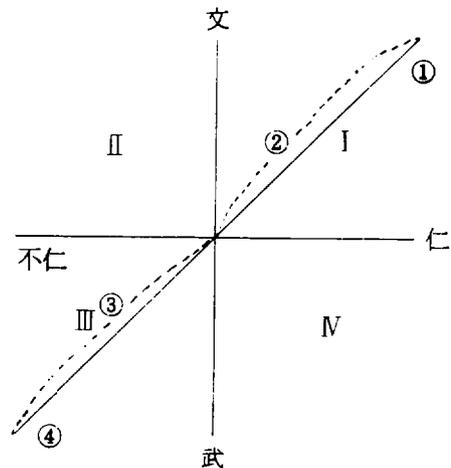
이는 도덕적 합리주의에 바탕을 둔 집권적·귀족정치 틀 속에서 작동했지만 왕권의 전제적·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장치로서 기능한 바 여기서 민주화의 희미한 줄기를 찾을 수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존엄성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기 위해 합의된 정책이 필요하며 권력이라는 수단이 필요하고, 이러한 수단이 정당하게 사용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정치과정과 행정과정의 활성화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인과 문의 종합은 우리 전통속에서 인간화와 민주화의 창조적 조화를 찾으려는 노력이며 또한 발전의 매듭이다. 왜냐하면 발전이 없는 인간화와 민주화는 공허하며, 인간화와 민주화 없는 발전은 비인간적이기 때문이다. 52)

이상의 세가지 발상은 발전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독특한 역사적·문화적 전통의 맥락을 기반으로 하되 체제와 민중의 평화적 관계에서 찾아야 하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발전분석의 좌표를 구성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II. 발전분석의 좌표

- X 축 : 발전을 추구하는 이념으로서  
 인간을 목적시 : 仁  
 인간을 수단시 : 不仁
- Y 축 : 발전을 추구하는 집행방법으로서  
 비폭력적 방법 : 文  
 폭력적 방법 : 武



여기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적용을 시도해 보자. 노자(老子)가 최상의 정치상태를 설명한 다음 글을 적용해 보겠다. 최상의 제왕이 되면 백성들은 그가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않는다.

52) 南宛星(譯), 老子道德經, (서울: 울유문화사 1970), pp. 64~67.

( I 상한의 ① ) 그 다음의 경우에는 친근감을 느끼고 칭송한다. ( I 상한의 ② ) 그 다음의 인물의 경우에는 이를 두려워 한다. ( III 상한의 ③ ), 그 다음의 인물일 경우에는 이를 경멸한다. ( III 상한의 ④ ) 위정자에게서 신의가 없으면 그 만큼 백성으로 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위정자가 함부로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치적이 오르면 백성들은 다 백성 스스로가 했다고 여기게 되는 정치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형태이다. 53) 『太上 下之有之 其次 親而譽之 其次畏之 其次侮之 信不定焉 有不信焉 悠前其貴言 功成事遂 百姓皆謂我自然』

또 한가지 예를 생각할 수 있는데, 나치스 독일은 ( III 상한의 ④ ) 히틀러란 반동정치가를 탄생시켰는데, 그는 국가 지상주의란 굉장한 목표를 내세운다. 특히 카리스마적 정치가들이 내세우는 목표의 특색은 굉장한 것이 특색인 듯 싶다. 국가주의, 경제우선주의 기술발전등도 굉장한 것들이라 생각된다. 자유와 평등을 주축으로 한 인간 개개인의 발전의 반대상황은 개인 통치자의 극대화인 데, 이와같이 굉장한 목표란 무기를 가짐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사실 카리스마, 국가주의, 경제우선주의, 기술발전이라는 굉장함은 개인의 인권, 균등한 경제분배, 전인(全人)의 발전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54)

여기까지 발전의 메카니즘을 분석하기 위하여 역사적 사실에 착안하여 발전의 기본과제와 발전의 분석좌표를 구성해 보았다. 이러한 구성은 착상을 시도해 보았는데 의의가 있으며 분석구조의 개념이라든가 그 구성에 있어 독단적 수준에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보다 더 깊은 연구와 수정을 거침으로서 발전되리라 생각된다.

53) E.F. Schmacher, *Small is beautiful*, (New York: Haper & Row, 1973), pp.154-160.

54) 韓完相, 民衆과 社會 (서울: 종로서적 1980), pp. 7-57.

**Abstract****A Preliminary Study on a Model of Analysis of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by Changhoon Ko*

This article examines some aspects of critical development theory and proposes on the applicability of preliminary analysis on direction of development to Korea on the basis of historical context. This simple insight has paved the way for the basis for a general model of development theory in Korea. I think that model, found in one form on another in most systemic works of development analysis, posits historical contexts.

First, I will begin by briefly reviewing the theoretical debates of the central issues between development and dependency theory, and compare how this debates heightened in developing countries. A look at the manner in which the problem occurred is followed by a discussion of the controversy between two perspectives. The competing claims of liberty and equality are given especial scrutiny in reviewing the philosophical tension between two positions. We will also look at the question of limit & possibility in the context of humanistic and self-reliant development.

On the basis in reviewing two perspectives on development, there are common task to overcome. In my opinion, I posits development metrix that compose of three development goals (1. equality, 2. liberty, 3. humanism) and development accomplishments (1. people with right consciousness, 2. the formation of goals, 3. social groups, 4. rationalized government) We will obtain twelve tasks from this metrix.

Second, I will try to propose huristic diagram on analysis of development on the basis of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I presuppose that ends of our development in Inn (仁) and means of obtaining this goals in Mun (文) through our history of Yi dynasty. Though the Inn as humanistic idea misuses as governing philosophy against people through historical experiences, the essentials of this idea have developed by Jung yakyong and crystalized through the heavenly way.

Mun has also our historical implications. Mun is the suppression of both direct and structural violence. Within this context, Mun is means of pursuing the goals of humanistic value peacefully. It requires democratic participation. It needs to necessitate the creation of a harmonious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and government.

I will try to redefine this critical concepts of the Inn (仁) and the Mun (文) and compose my diagram of development analysis. Within this context, peace is a synthesis value of the Inn & Mun. I think that peace is a road to development and is achieved through practice of self-reliant development how to combine independence with interdependence, liberty with equality and ours with others on a humanistic perspective.

Much work needs to be done within a humanistic perspective to clarify its concepts, interrelationships and applicabilities to real world, as well as to assess its capacity to explain development phenomena in various parts of our societies.